

제공일자	2013. 4. 11(목)	담당자	진익 경영전략실장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	연락처	02-3775-9019 010-8883-0916
			총3매

제목 : 『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』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의 진 익 연구위원, 오병국 연구원, 이성은 연구원은 정책보고서 『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』을 발간하였음.

정부재정이 뒷받침하는 공적안전망 위주 복지체제 한계

- 현재 우리나라 공적안전망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.
- 국가별 여건(국민부담률, 소득수준, 노령화수준 등)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 수준(GDP 대비 공공사회지출과 민영보험료 합계의 비율)을 비교 시,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56~72%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됨.
 - 주요 공적안전망(사회보험)이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, 보장수준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.
 - 2012년 3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(약 4,142만 명) 중 가입자 비중을 보면, 일부 국민(고용보험 약 26%, 국민연금 약 26%, 건강보험 약 37%)만이 보장을 받고 있음.
 -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(약 42%)이 OECD 평균(약 57%)보다 낮고,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수준(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)도 약 58%로 OECD 평균(약 72%)보다 낮음.

- 재원조달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부재정이 뒷받침하는 공적안전망 위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맞춤형 복지,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쉽지 않음.
-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출확대와 재원부족을 고려 시, 현 공적안전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채무가 임계수준(GDP 대비 80~100%)을 넘어설 것임.
 -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약 34%에서 2040년 약 91%, 2050년 약 136%, 그리고 2060년 약 219%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.
 - 공적안전망만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휴먼서비스 욕구 증가, 현금급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전환 등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.

민영 보험산업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가능

-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효율성을 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형태의 맞춤형 복지(사회안전망) 체계의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민영보험산업이 제공하는 사적안전망(연금, 건강보험, 요양보험, 재해보험 등)을 통해 공적안전망을 보충적,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함.
 - 모든 가입자에게 표준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적안전망과 달리, 민영보험은 가입자별 생애주기, 소득수준, 니즈 등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
- “사회적 민영보험(social-private insurance)”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함으로써 전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.

-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면 미가입자, 적용제외자, 비임금근로자, 실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입 및 전달체계(조직, 인력 등)의 개선이 필요함.
- 민영 보험산업의 인력(약 48만명의 설계사, 손해사정 및 계리 전문가 등)을 활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보험료 징수, 피보험자 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음.
- 일종의 정책성 보험으로서, 고위험·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.
- 정책당국은 민영보험산업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가야할 수 있음.
- 정책당국은 기존의 수요창출 정책(예, 세제혜택, 홍보·교육 등)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장기저축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
- 공급확대 정책(예, 사회적 민영보험 등)을 통해 사적안전망 관련 제도·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보장수단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

□ 보험산업이 공적안전망의 파트너로서 사회적 민영보험과 같은 사적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국민들과 정책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.

- 사적안전망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금융소비자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사업모형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임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